

## 성명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동성애자들을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권리 신장과 자유를 위한다는 이유로 수 많은 법적·도덕적 논란을 야기하며 서울광장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음란한 물건들을 전시·판매·반포하고 음란한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퀴어축제로 말미암아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 관념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는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에이즈의 확산 등 보건적인 문제와 균형법 제92조의 6 폐지로 인한 안보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사회와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퀴어축제를 반대하며 규탄한다.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음란한 물건들을 전시·판매하고, 음란한 행위로 수 많은 법적·도덕적 논란을 야기하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퀴어축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임이 명백하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동성애를 축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으로 둔갑시켜 동성애를 조장·확산시키는 퀴어축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는 퀴어축제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를 압박하여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과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전환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성적 지향 문구를 삽입한 각 교육청과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고 미래세대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3. 우리는 퀴어축제를 통해 국회와 사법기관을 압박하여 군대 내 동성 간 성추행·성폭력 처벌에 관한 균형법 제92조의 6폐지를 통해 군대 내 동성애를 자유화 시켜,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림으로 국가안보위기를 초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4. 우리는 동성애의 심각한 보건적 유해함과 동성간 성행위, 특히 남성간 성행위가 에이즈 발병과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물에 동성애를 다시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5. 서울시민의 건전한 문화와 공익을 위한 서울광장에서 선정적인 음란성 공연과 음란물을 전시하여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과 그 가정에 수치심과 혐오감을 조성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동성애에 빠질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묵인하고, 이를 조장하는 서울시장과 퀴어축제 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6. 수 없이 많은 도덕적·법적 논란이 있는 퀴어축제에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공

개적인 논의나 의사결정 과정 없이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개인의 일탈된 성행위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침탈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7.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침탈하는 '성적지향' 문구와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소수자 인권 조항'의 삭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바로 알릴 것이다.

8. 동성애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고, 보건적인 문제로 인하여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바, 우리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탈동성애운동을 통해 그 분들의 재활을 도울 것이다.

9. 우리는 퀴어축제가 사회의 가치와 선량한 풍속 및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내에서 진행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키고 준수하여야 할 규범을 지키며, 다른 시민들에게까지 그 위법을 감수하라고 강요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서울시 및 정부도 다른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10. 우리는 국민대회를 통해 우리 가정과 사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문화를 창달하며, 아름다운 결혼과 행복한 가정 문화를 보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4일

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참가자 일동